

지역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 방향: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Directions on Sharing Economy in a Region: Focusing on the Case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송영현 Song Younghyun**, 최명식 Choi Myungshik***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produced when sharing economy related policies apply to a region, and to suggest sharing economy policy direction at the regional level using the Chungcheongnam-do Province case. To achieve this goal, first, we reviewed literature and analyzed major policies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then, found out five issues of sharing economy in a region such as concept, value, function, stage, and resource. We also investigated results of the survey that asked residents of Chungcheongnam-do about sharing economy policy related general issues. Based on the survey analysis, we suggested the necessity of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or sharing economy of a region. First, it is needed to identify the concept of sharing economy at the regional level. Second,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major functions of sharing economy with balance and apply it to the policy. Third, sharing economy-relate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clear awareness about the developing stage of sharing economy.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oduce and manage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shared resources mainly using abandoned resources.

Keywords: Sharing Economy, Chungcheongnam-do Province, Sharing Economy Policy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외,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공유경제의 활용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소비의 합리화 추세 강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비와 관련된

생활양식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IC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바일 플랫폼에 의한 자원 공유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현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공유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자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Juniper Research(2017)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이미 미화 186억 달러 규모의 공유경제 시장이 형성되었으

* 본 논문은 충청남도청의 발주를 받아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연구'결과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함.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제1저자) | Senior Researcher, Dept. of Economy and Industry Research, Chungnam Institute | Primary Author | pm102@cni.re.kr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교신저자)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Corresponding Author | mschoi@krihs.re.kr

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볼 때 2022년에는 미화 42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활용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교통과 숙박으로 대표되는 기업 차원의 공유경제 외에도, 중앙과 지방정부 정책 차원에서의 공유경제 활용 추세도 강화되고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각 부처별로 공유경제 정책사업을 추진하던 중앙정부는, 2010년대 중반 들어 범부처 차원의 무역투자진흥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추진과 함께 입법 노력도 병행되어, 국가차원의 공유경제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유경제기본법안이 2018년 발의된 바 있다. 지방정부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며 자체적으로 공유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5개 공유경제 조례를, 58개 기초지자체에서 61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즉, 광역지자체의 2/3 가량이 공유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초지자체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특별시¹⁾를 필두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활발하게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와 성남시, 광주광역시 남구와 북구 등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활발히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기 지방정부들은 모두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공간, 물건, 재능, 지식, 정보 등 분야의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²⁾

충청남도 역시 이러한 추세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 중이다. 2019년 9월 공유경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더 행복한 충남 경제발전전략,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2차 5개년계획’,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정책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도청,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기초지자체(아산시, 천안시 등) 등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차원의 공유경제 추진도 감지되고 있다.³⁾ 이처럼 충청남도 와 산하 시군의 공유경제 활성화 의지가 큰 편이며, 민간의 공유경제 잠재역량도 존재한다. 그러나 공유경제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사업도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쟁점사안들에 대한 고찰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논문은 공유경제 관련 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적용될 때의 특성을 파악하고, 충청남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지역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쟁점을 살펴보고, 해당 쟁점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상기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지역이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은 충청남도와 일반지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시사점과 보편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사점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은 기업과 중앙정부 등 거시적 차

1) 2012년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공유경제 정책을 시작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뿐 아니라 산하 자치구에서도 공유경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시 산하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에서 공유경제 조례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 지방정부별 공유경제 정책의 세부내용은 송영현, 신동호, 김종화, 홍원표 외(2019)를 참고하기 바람.

3) 천안시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에서 추진하는 공간공유사업 <우리사이>, 공주 구도심 일대의 자영업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호텔(커뮤니티 호텔)> 사업 등이 그 예임.

원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공유경제 정책의 주요 쟁점 분석과 구체적인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관점에서 체계화된 공유경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공유경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연구의 성격에 따라, 공유경제의 기본적인 쟁점과 원리에 관한 연구, 지역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연구의 두 분야로 나눠 살펴보았다.

우선, 공유경제의 기본적인 쟁점과 원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광노완(2013)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등장 시기에 대한 논란이 일부 존재하나, 공유경제의 역사가 길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보편적이다.⁴⁾ 이에 따라 공유경제를 작동하게 하는 기본적인 원리, 공유경제 효과에 대한 쟁점 사안들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우선 공유경제 개념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Botsman(2013)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유료 또는 무료로 현 시점에서 완전히 활용되지 않는 기술, 공간, 물건 등을 공유하는 경제모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외에도, 공유경제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경우가 많다(황영모, 이인우, 오윤덕, 신동훈 2015, 11-13). 커먼즈, 플랫폼 비즈니스, 협력적 경제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정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송영현, 신동호, 김종화, 홍원표 외(2019), 정경석(2018) 등에서 제안하듯

이, 공유경제의 가치를 경제, 사회, 환경 중 어떠한 분야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Botsman and Rogers(2010)가 제안한 상품 서비스 시스템, 재분배 시장, 협력적 생활방식의 기능에 대한 지역적 관점의 탐구도 지속되고 있다. 김형균, 오재환(2013), 황영모, 이인우, 오윤덕, 신동훈(2015) 처럼 생활방식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송헌재, 신우리, 조하영(2019), 김하진, 유석연(2019)과 같이 상품 서비스와 재분배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함창모(2018)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의 발전단계를 지역의 현실에 맞게 구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Botsman(2013)과 조용준, 김리영, 신지윤(2018)의 연구처럼, 공유경제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형화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역차원에서 공유경제를 고민한 연구들도 다수이다. 허지정, 노승철(2018)의 경우 서울시 숙박 공유업체의 공간분포와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최현(2013)의 경우, 제주의 공동목장을 사례로 공유자원의 특징과 정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이용균(2018)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생활방식 전환에 초점을 맞춘 공유경제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서지민, 석종수, 이수기(2018)의 경우, 인천시민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정책수요를 발굴하였다. 카셰어링을 통한 경제, 사회, 환경적 효과가 지역에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만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Pollio(2019)는 남아

4) 일반적으로 공유경제는 Lessig(2008)이 비가격적인 것에 기반을 둔, 사회적 관계가 핵심 역할을 하는 경제활동을 강조하며 그 논의가 시작되었음.

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사례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시한 플랫폼 자본주의가 지역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제적 효율성과 윤리적 가치적 측면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긍정·부정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Vith, Oberg, Hollerer and Meyer (2019)는 도시지역이 공유경제 정책을 펼침에 있어 어떠한 거버넌스 구조를 가져야 할지를 검토하였다.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적 기반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이 공유경제를 추진할 때는 중요한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원리를 세워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기 내용을 수행할 시에도, 지역의 특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역차원 공유경제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지역 차원의 공유경제 쟁점을 부분적으로 논의해왔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쟁점과 관련한 정책이슈를 도출한 후,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II. 지역 공유경제 정책의 쟁점

1. 논의 배경

공유경제에 대한 쟁점은 다양하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쟁점으로 사회적인 안정성 여부, 거래의 위험성, 기존 산업영역과의 관계,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간의 이익 배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훨씬 더 본질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유경제의 범위가 폭넓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을 중심으로 추

진되던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가 확장됨에 따라, 정부도 정책적 측면에서 공유경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공유기업에 대한 과세, 플랫폼 기업 지원 여부와 같은 현실적인 정책처방 문제부터 공유경제의 개념화와 가치에 관련된 정책이념, 방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정책의 쟁점들이 도출되었다(함창모 2018, 24-26).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공유경제 정책의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의 지향성, 대상, 목표, 발전단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의 차이를 간과하고 지역의 정책쟁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별로도 공유경제의 정책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방정부별로 추구하는 정책목표, 가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공유경제의 발전 수준 등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공유경제의 주요 이론 동향, 국내 중앙정부 및 주요 지방정부의 공유경제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경제와 관련된 정책 쟁점을 개념, 가치, 기능, 단계, 자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상기 5가지 분야를 분석틀로 하여 지방정부 공유경제 정책의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주요 쟁점

1) 개념

공유경제 정책을 펼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공유경제의 개념이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은 Botsman(2013)이 제시한 ‘유료 또는 무료로 현 시점에서 완전히 활용되지 않는 기술, 공간, 물건 등을 공유하는 경제모

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그 폭은 상당히 넓다. 커먼즈(Commons)부터 플랫폼 비즈니스(Platform Business)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적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유경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공유경제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공동체와 사회·환경적 가치, 공동 소유와 생산을 중시하는 커먼즈(Commons), 협력적 소비와 이용을 중시하는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 접근성과 확산을 중시하는 수요기반 경제(On Demand Economy)와 접근 경제(Access Economy), 기술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중시하는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의 특성들을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수단에 맞추어 개념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황영모, 이인우, 오윤덕, 신동훈 2015, 11-23).

한편, 중앙정부는 경제·산업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플랫폼 비즈니스로 공유경제를 개념화하고 있다.⁵⁾ 새로운 서비스산업 분야로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들은 지역 사정에 맞추어 차별성 있게 공유경제를 개념화하고 있다. 지역별로 공유경제 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눔의 정신을 강조하는 광주광역시 경우 '공유문화도시'를 표방하며 공유경제를 '환경적 문제, 풀뿌리 주민자치 문제, 지역경제 문제를 완화·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광주광역시 2019, 6). 이에 반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새로운 산업수단을 중시하는 경기도의 경우, '공유적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공유경제를 '공유자산, 지식 등 공공의 재화·서비스를 공유한 플랫폼 구축으로 협업 소비와 협력적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경기도 2017, 1). 위 사례들을 통해 지역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지방정부가 공유경제를 명확히 개념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치

지방정부가 공유경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역시 중요한 쟁점사항이다. 공유경제란 이름만큼, 흔히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추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유경제 정책의 우선적 가치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송영현, 신동호, 김종화, 홍원표 외(2019), 황영모, 이인우, 오윤덕, 신동훈(2015)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유경제 정책도 상당수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사례를 통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경우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병행하여 강조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핵심적인 정책의 가치로 선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로 2012년부터 공유경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유경제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중시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공유기업(단체)을 선발함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 외에도, 사회적, 환경적 편익의 제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5) 2019년 1월 범부처적으로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유경제를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로 정의하였음.

있다. 또한 고령자층과 청년세대의 주거, 일자리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들을 대표적인 공유경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2019, 12).⁶⁾ 2014년부터 공유경제를 정책화해 온 대전광역시의 경우, 사회문제를 시민들의 지식과 재능의 공유를 통해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정정석 2016, 40).⁷⁾ 즉, 서울특별시는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고루 중시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사회적 가치추구에 보다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유경제 정책의 핵심가치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능

Botsman and Rogers(2010)에 의하면, 공유경제의 기능은 크게 상품 서비스 시스템, 재분배 시장, 협력적 생활방식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능은 상품의 이용 수준을 극대화하는, 실리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으로써의 기능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기능은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재배치되는 시장의 기능을 의미한다. 세 번째 기능은 협력을 통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제고하는 행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앞서 본 쟁점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조하는 기능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경제규모가 큰 중앙정부나 수도권에 속해 있는 경기도의 경우, 상품서비스 시스템과 재분배 시

장의 기능을 강조하는 편이다.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협력적 생활방식 기능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⁸⁾ 김형균(2013), 황영모, 이인우, 오윤덕, 신동훈(2015)에 따르면, IT 플랫폼 산업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타 지방정부에 비해 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위 논의를 종합해볼 때, 공유경제의 어떠한 기능을 강조해야 하는지 역시 지역 공유경제 정책의 중요한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단계

공유경제의 발전단계는 신선영, 김영화(2018)의 ‘도입-표준화-성숙 단계’ 또는 함창모(2018)의 ‘준비-도입-확산 단계’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도입기에는 공유경제 플랫폼 개발 및 활용을, 표준화기에는 다양한 관련 사업의 추진을, 성숙기에는 지역 문제 해결 및 법제도 환경 구축을 실시한다. 후자의 경우 준비기에는 공유경제 인식개선 및 공유영역 발굴을, 도입기에는 제도, 문화형성을 통한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확산기에는 공유경제 주체의 다양화, 플랫폼의 개방성 증대,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실시한다. 법과 제도, 문화적 환경 구축 선행을 중시하는 국내의 현실을 감안할 때, 후자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공유경제 현황과 발전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지

6) 고령자와 청년이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한자봉 세대공감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임. 서울특별시는 이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음.

7) 대전광역시는 시민들의 지식과 재능을 공유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건너뉴 리빙랩’ 사업을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음.

8) 2019년 5~6월 총 3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 광주광역시청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 전문가 자문을 개최하여 확인한 결과임.

역의 공유경제 발전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조용한 결과, 막대한 국비 사업을 유치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⁹⁾ 또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펼칠 경우에도 지역의 공유경제 발전 수준에 맞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지역의 공유경제 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5) 자원

자원은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Botsman(2013)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필수요소로 적절한 자원규모, 여분의 자원, 공유에 대한 믿음, 당사자 신뢰를 들 수 있다. 이 중 자원과 관련된 요소가 절반을 차지할 만큼, 자원은 공유경제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하고, 이 중 여분의 자원이

적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지방정부가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 가능한 자원이 무엇인지, 규모는 충분한지, 자원의 성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유 가능한 지역의 자원은 유형과 무형자원, 유희와 투자자원, 공공과 민간자원 등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조용준, 김리영, 신지운 2018, 17-9).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공유경제의 형태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이를테면,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활용할지, 실제적인 자원을 활용할지 여부 등에 따라 유·무형 자원의 활용범위가 결정된다. 또한 유희자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공유경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인지, 비즈니스의 성격을 강조하여 신규자원 마련을 위한 투자를 용인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공유 가능한 자원 범위에 유희자원만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원도 포함할 것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¹⁰⁾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경우, 지역민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도가 충분히 높을

Table 1_ Five Issues of Sharing Economy Policy in a Region

Category	Contents
Concept	- "Sharing Economy" contains extensive contents and concepts from commons to platform business - Conceptualizing "Sharing Economy" considering the objective, value, and method of a regional government is needed
Value	- The values that we want to realize through sharing economy are composed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 - It is important to select core values of sharing economy policy based on correct identif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 region
Function	- Functions of sharing economy are mainly divided into product service system, redistribution market, and collaborative lifestyle - Priority of function depends on economy scale of a region and importance of a sense of community
Stage	- Developing stage of sharing economy: Preparation-Introduction-Diffusion - It is important to objectively figure out sharing economy stage in a region and to carry out policies according to each stage
Resource	- Sharable resources in a region divide into tangible and intangible, existing and brand-new, and public and private resources - Policy coverage should be determined clearly because the extent of shared resources changes according to level of residents' awareness about sharing economy and their attitude toward basic principles of sharing economy

9) 2010년대 중반 이후 일부 지방정부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재생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으나, 기대한 만큼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임(공유농업기업 대표와 인터뷰, 익명 2019a).

10) 유희자원은 이미 생산하였거나 구매한 자원 중 이용도가 낮은 자원을, 투자자원은 신규 생산 또는 구매한 자원을 의미함.

경우, 민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 공유경제 자원을 발굴하는 정책을 펼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자원의 성격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영현, 신동호, 김종화, 홍원표 외(2019)가 언급하고 있듯이, 공공과 민간의 공유경제 사업과 수반되는 공유자원의 형태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변화에 대해 지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역시 주요 쟁점의 하나이다(종합적인 쟁점사항 정리는 <Table 1> 참조).

III. 충청남도 주민 의견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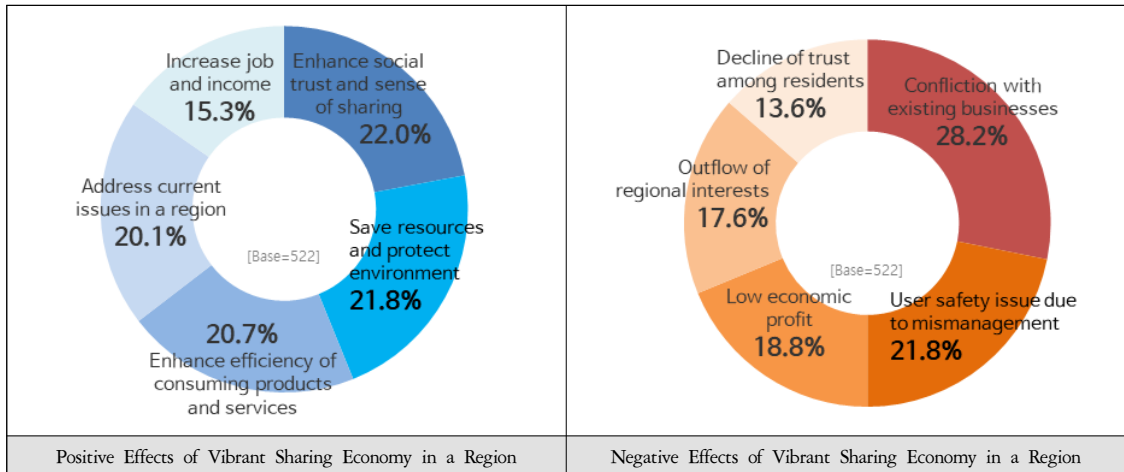
지역의 공유경제정책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충청남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시민(도정모니터단, 도민평가단, 일반 시민)들로, 지

역별로 성별, 연령별 인구수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522명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세부사항은 아래의 각주 내용과 같다.¹¹⁾

2.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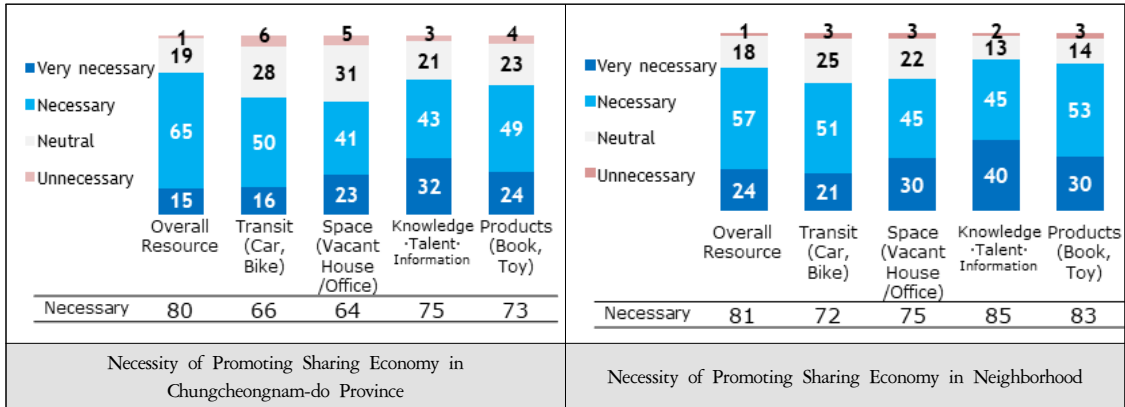
이 연구와 관련되는 충청남도 주민들에 대한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었다(<Figure 1> 참조). 공유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로는 사회적 신뢰도 및 공유의식 함양,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상품 서비스 소비의 효율성 증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 경제, 사회적 가치가 동시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비즈니스 측면만 강조하지 않고 세 가지 기능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Figure 1_ The Effects of Vibrant Sharing Economy



11) 응답자들은 남자 57.7%, 여자 42.3%였으며, 연령대별로 응답자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4-50대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7.3%로 많은 편이었음. 응답자 직업분포는 판매서비스직, 농축림수산업, 사무직이 전체 응답자의 7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도내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었음. 설문내용은 공유경제에 대한 경험·인식·태도, 자원의 소유 및 이용, 공유의향수요 및 공급 측면, 공유경제의 긍·부정 효과, 공유경제 정책방향·발전전망·기여도 등으로 구성되었음.

Figure 2_ Necessity of Vibrant Sharing Economy



Note: n=522, %

주민들의 성향을 볼 때, 충청남도가 향후 어떤 형태의 공유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의 부정적 효과로는 기존 사업영역과의 마찰, 운영관리 부실에 따른 사용자 안전 문제를 지적하였다. 즉, 공유경제가 새로운 동력이 아닌 기존 사업의 효과를 약탈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 체계화되지 않은 서비스로 인한 안전성 우려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영역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전체보다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Figure 2> 참조). 공유경제 전반이나 분야별 필요성 모두 충청남도보다는 응답자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기 지역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공유경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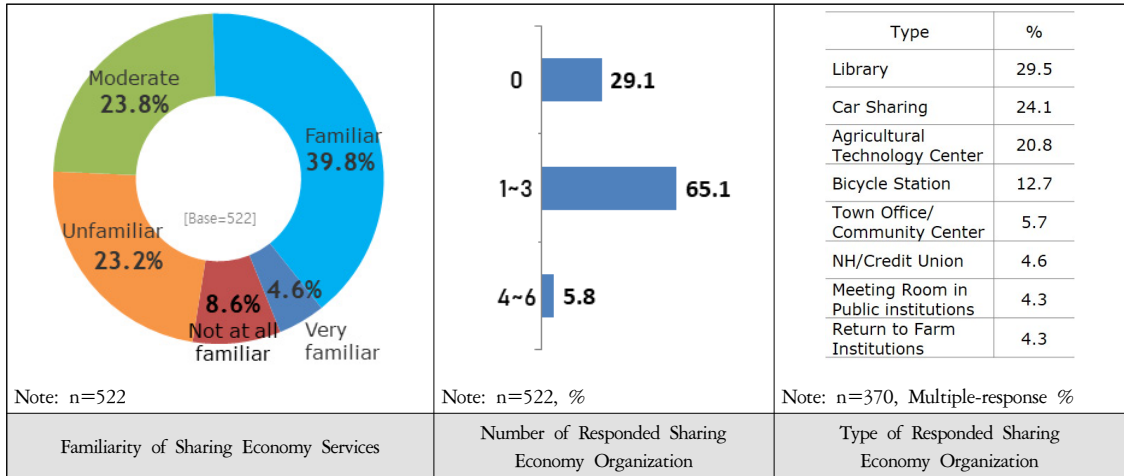
공유경제 서비스 인지도에 관한 질문에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인지하는 주민의 비율이 약 68.2%로 나타나 많은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참조). 반면에 공유경제를 전혀 모르거나(8.6%), 잘 모른다고(23.2%) 응답한 비율이 약 31.8%를 차지하여 아직도 상당수의 주민들에게 공유경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는 공유기업(단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이용 중심의 공유활동 추진단체들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공유경제 기업(단체)의 수를 1~3개 응답하였으며, 4개 이상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8%에 불과하였다. 응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단체)이 공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응답자 중 일부가 유희공간 또는 물품 공유사업을 공유기업이나 단체로 착각하여 응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실제 공유경제 인지 수준은 조사 결과보다 더 낮을 수 있다.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정책현황과 공유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 수준으로 판단해 볼 때,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발전단계는 아직 태동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실시되어야 할 정책으로 공유문화 육성, 법제도 기반 조성, 지역특화형 공유경제 사업발굴 등이 꼽혔다(<Figure 4> 참조). 즉, 전반적인 공유경제 환경조성 및 생활방식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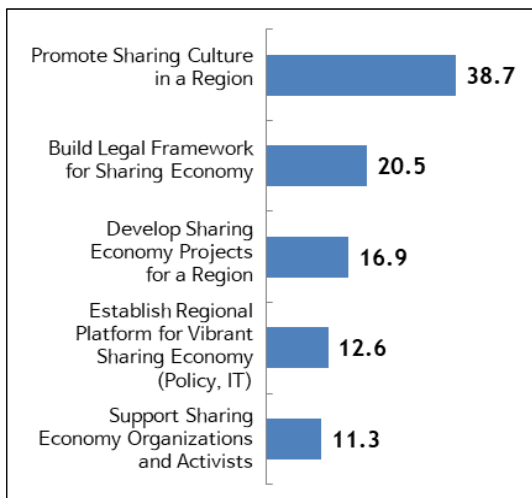
Figure 3 _ Necessity of Vibrant Sharing Economy



한 공유문화 육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과 실제 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공유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실제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경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약 81.4%로 나타났으나 활용도가 높다는 응답은 35.1%에 불과했다(<Figure 5> 참조). 충청남도에 공

유경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나 공유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약 65%가 지역의 공유경제 활용 수준을 보통 이하로 응답하여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Figure 4 _ Preferred Policy for Vibrant Sharing Economy



Note: n=522, %

유자원을 자신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다른 사람의 자원을 이용할 의향을 묻는 주요 측면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충청남도 주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Figure 6> 참조). 자신이 공유자원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절반가량(54%)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자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주민은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종류별로 인식도의 차이는 존재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공유경제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정도와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공급 측면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충청남도 주민들은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7> 참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잘 이용한다

Figure 5_ Necessity and Use Level of Sharing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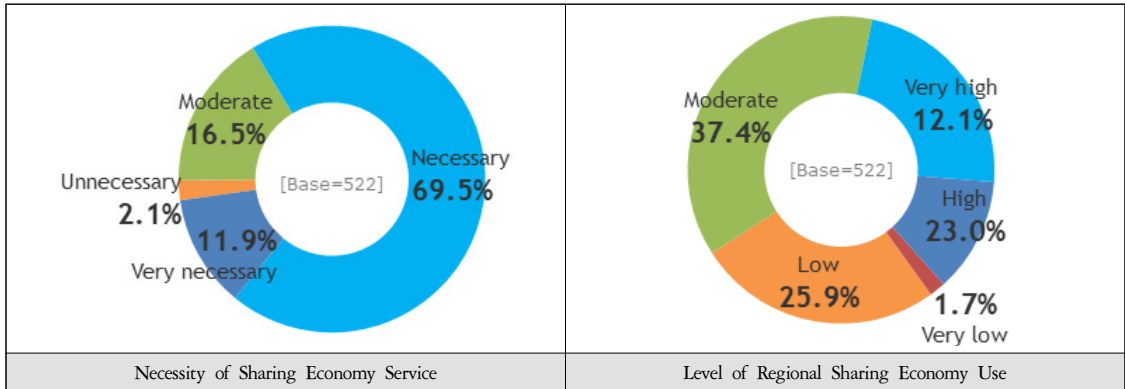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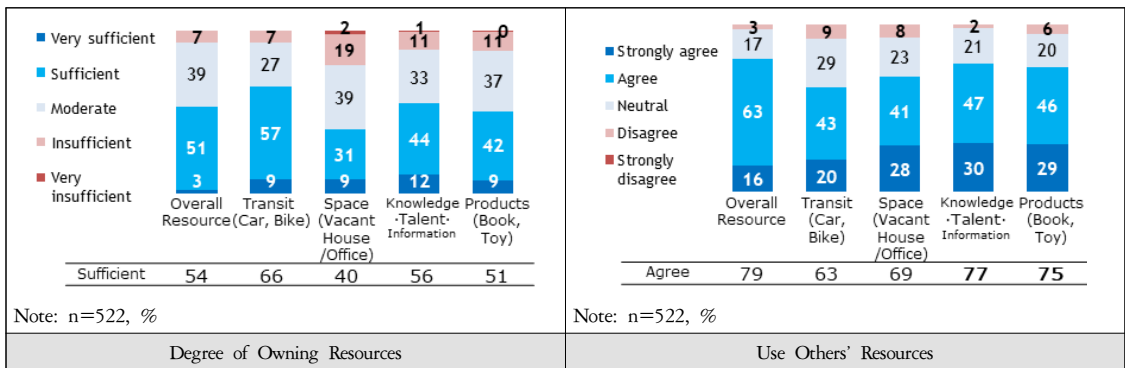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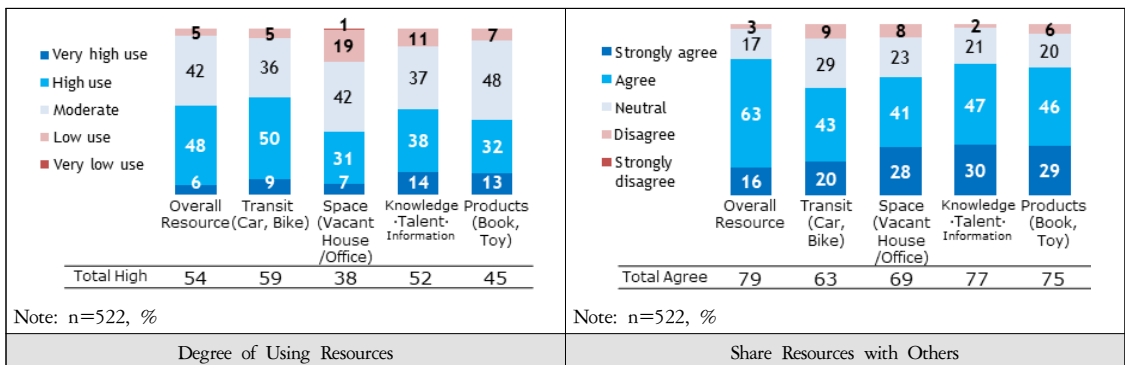
Figure 6_ Demand for the Sharing Economy



는 응답이 54%, 자신의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겠다는 응답이 79%였다. 수요 측면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종류별로 인식도의 차이는 존재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유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주민들의 공유자원 활용의지가 높다는 점과 앞서 살펴본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 성향을 감안하여, 지역 자원의 공유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Figure 7_ Supply for the Sharing Economy



IV. 지역차원의 공유경제 정책방향

앞서 살펴본 지역 공유경제 정책의 쟁점과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 설문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차원의 공유경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정책방향은 충청남도에 대한 정책방향, 일반지역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공유경제 개념 확립

충청남도의 경우, 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담은 공유경제 개념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주민들이 공유경제의 경제적인 가치뿐 아니라, 사회,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경제를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 역시 공유경제 개념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유자원의 확보는 공유경제 추진의 핵심요소임을 확인한 바 있다.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의 성향을 감안할 때, 공유자원을 마련함에 있어 유희자원 중심의 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개념에 담을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경제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설문결과를 통해 공유경제와 관련된 산업적 기능 육성 외에도, 전반적인 환경조성, 생활방식과 유사한 공유정책 문화육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충청남도 주민들이 공유경제를 서비스 산업분야의 사업모델이자 생활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충청남도

의 공유경제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에서 추구하는 공유경제는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해 지역 유희자원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서비스 산업분야의 사업모델이자 생활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제반 공유경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충청남도의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차원에서 지역이 공유경제를 개념화할 때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할지 살펴볼 수 있다. 지역차원에서 공유경제를 개념화할 경우, 지역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향점을 설정하고, 지역 자체의 공유경제 개념을 확립한 후, 해당 개념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유경제의 주요 기능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정책화

충청남도는 공유경제를 추진함에 있어 상품 서비스 시스템, 재분배 시장, 협력적 생활방식 기능들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봤듯이, 충청남도 주민들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산업적 기능과 생활방식을 고루 중시하였다. 이 같은 주민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상품 서비스 시스템, 재분배 시장, 협력적 생활방식과 관련된 정책을 고르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 공동체성을 특히 강조하고 관련된 다양한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최근 추세를 고려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활방식과 관련된 정책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¹²⁾

일반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

12) 충청남도청은 2015년부터 공동체와 관련된 거버넌스 운영, 관련 조직(공동체정책관실)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하며 적극적으로 공동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할 때 어떤 기능을 강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일반적인 지역 차원에서의 공유경제 기능 역시, 충청남도과 마찬가지로 기능들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정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지역특징에 따라 특정 기능을 강조할 필요는 있다. 이를테면 공유경제 관련 산업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경제성과를 강조하는 지역의 경우 상품 서비스 시스템과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관련 산업기반이 약하고 지역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지역의 경우 협력적 생활방식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 특정 기능을 강조한다는 것이 다른 기능을 전면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특정 기능이 전면적으로 배제될 경우, 사회적경제 정책, 공동체 정책과 같은 유사정책과 공유경제 정책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정책의 추진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¹³⁾

3. 발전단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정책 추진

충청남도의 공유경제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정책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주민들의 인식 수준을 종합해볼 때, 충청남도의 공유경제는 앞서 살펴본 공유경제 발전단계 중 준비, 도입기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공유경제 기반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조례와 규칙 같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공공의 전담부서 및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조직적 기반 마련도

필수적이다. 또한 공유경제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 등의 인력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지향성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일반지역 차원에서의 발전단계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검토해볼 수 있다. 우선, 지역이 공유경제의 발전단계(준비, 도입, 확산)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단계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함창모(2018)가 제안한 바와 같이 발전초기 지역의 경우 기반구축과 공공중심의 공유자원 확보를, 발전단계가 높은 지역의 경우 공유경제의 참여주체와 플랫폼의 개방성 증대, 공공과 민간의 공유자원 확보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유희자원 중심의 다양하고 입체적인 공유자원 발굴·관리

충청남도의 공유자원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충청남도의 주민들이 환경적 가치의 상당히 중시함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신규 투자자원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자원화 하는 방안을 가급적 배제하고, 이미 생산 또는 구매된 자원 중 유희수준이 높은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유경제 태동기의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충청남도는 공공중심의 공유자원 발굴·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자원공유 의향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으나, 공유경제의 주민

13) 공유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은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공동체 정책분야의 기능적 차별성 확보가 공유경제 정책의 중요한 추진동력임을 강조하고 있음(경제, 교통, 복지, 교육, 문화 5개 분야의 공유기업 대표 또는 공공기관 공유경제 정책사업 시행자 총 5인과 인터뷰, 익명 2019b).

Table 2_Sharing Economy Policy Direction in a Region

Category	Policy Direction / Suggestions
Establish the Concept of Sharing Economy (Concept, Value, Function, Resou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ungcheongnam-do: Identify sharing economy as "Project model and lifestyle of service industry that facilitate use of abandoned resources in a region to seek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 with balance" - General: Set a goal through investigating a value and function of a region, and identify concept of sharing economy of a region, and then implement sharing economy policy based on the concept
Emphasize Main Functions of Sharing Economy with Balance and Make Policy (Fun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ungcheongnam-do: Equally emphasize product service system, redistribution market, and collaborative lifestyle, and link them with policy - General: Make policies focusing on the product service system and redistribution in the region with well established sharing economy industrial base that stresses economic performance, and focusing on collaborative lifestyle in the region with weak industrial base that stresses a sense of community
Implement Policy Based on Clear Awareness of Developing Stage (Stage, Resou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ungcheongnam-do: Considering the stage of regional sharing economy (preparation and/or introduction), policies for establishing sharing economy base and mid- to long-term road map for each stage are needed - General: Set policies suitable for sharing economy developing stage according to the stage of a reg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itial stage: focus on the establishment of sharing economy foundation and production of public shared resources • Advanced stage: focus on sharing economy partners and openness of platform, and production of public and private shared resources
Produce and Manage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Shared Resources Mainly Using Abandoned Resources (Resou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ungcheongnam-do: Firstly, Chungcheongnam-do should produce shared resources focused on abandoned and public resources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emphasize on environmental value at the initial stage of sharing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duce and manage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private shared resources in the future based on the fact that many residents strongly want to share their resources - General: Under the principle of developing shared resources mainly from abandoned resources, produce and manage public shared resources at the initial stage of sharing economy and/or public and private shared resources at the advanced stage of sharing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duce and manage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shared resources responding to diversification of sharing economy type

인식도가 높지 않은 현 상황을 같이 고려해볼 때, 공공기관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발전 수준이 올라가고 주민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충분히 제고되었을 때, 민간의 공유자원을 발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자원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공유의지가 강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향후 다양하고, 입체적인 민간의 공유자원 발굴·관리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공간, 지식·재능, 물품 등으로 정형화된 형태의 공유자원 외에, 해당 자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융·복합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지역차원에서 살펴보면, 유희자원 중심으로 공유자원을 발굴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상기 원칙하에서 공유경제 발전초기에 위치한 지역은 공공중심의 공유자원을, 발전단계가 높은 지역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공유자원을 함께 발굴·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충청남도과 마찬가지로 공유경제 형태의 다변화 추세에 조응하여 다양하고 입체적인 공유자원 발굴·관리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유경제 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적용될 때 가지는 쟁점을 파악하고, 충청남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의 공유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와 중앙,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개념, 가치, 기능, 단계, 자원 등 지역 공유경제 정책의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이후 충청남도 주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정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질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앞서 살펴본 쟁점에 대한 충청남도 주민들의 관점과 정책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와 일반지역 차원에 대한 공유경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차원의 공유경제 개념 확립, 공유경제 기능의 균형 있는 강조와 정책화, 공유경제 발전단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에 기초한 정책 추진, 유희자원 중심의 다양하고 입체적인 공유자원 발굴·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방정부의 공유경제 추진에 있어 철학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차원의 공유경제 개념 확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충청남도라는 구체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관점에서 체계화된 공유경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 공유경제 태동기에 있는 지역을 사례로 하였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성숙, 확산기에 있는 지역들에 대한 검토가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해당 분야의 후속연구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1. 경기도 공유시장경제국. 부처 주요업무보고. 2017년 5월 26일. 경기: 경기도 공유시장경제국.
Department of Sharing Market Economy in Gyeonggi. Major Tasks Reports on Department of Sharing Market Economy in Gyeonggi-do. 2017.05.26. Gyeonggi: Department of Sharing Market Economy in Gyeonggi-do.
2. 락노완. 2013. '공유도시 서울'과 글로벌아고라의 공유도시. 마르크스주의 연구 10권, 3호: 146-171. <http://doi.org/10.26587/marx.10.3.201308.006>

Kwack No-Wan. 2013. 'Sharing City Seoul' and a sharing city of 'Glocal Agora'. *Marxism21* 10, no.3: 146-171. <http://doi.org/10.26587/marx.10.3.201308.006>

3.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2019년 광주광역시 제1차 공유촉진위원회 회의자료. 2019년 1월 30일. 광주: 광주광역시 공유촉진위원회.
Department of Self-administration in Gwangju City. 2019. Document for 1st Conference of Committee for Promoting the Sharing Economy in Gwangju City. 2019.01.30. Gwangju: Committee for Promoting the Sharing Economy in Gwangju City.
4. 김하진, 유석연. 2019. 웨어하우스 수요·공급 결정요인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권, 2호: 5-20.
Kim Hajin and Yoo Sukyeon. 2019. Comparative analysis of determinants by demand and supply of shared housing. *Urban Design* 20, no.2: 5-20.
5. 김형균, 오재환. 2013. 도시재생 소프트 전략으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Kim Hyunggyun and Oh Jaehwan. 2013. *A Study of Sharing Economy as a Soft Strategy for Urban Regeneration in Busan*. Busan: Busan Development Institute.
6.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2019. 서울시 공유 정책 현황 및 사례발표. 2019년 4월 24일. 서울: 서울시 공유촉진위원회.
Director for Social Innovation in Seoul City. Sharing Policies and Case Report in Seoul City. 2019.04.24. Seou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Sharing Economy in Seoul City.
7. 서지민, 석종수, 이수기. 2018. 공유경제 관점에서 카셰어링이 교통수단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천시 2017년 카셰어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3권, 2호: 107-121. <https://doi.org/10.17208/jkpa.2018.04.53.2.107>
Seo Jeemin, Sheok Chongsoo and Lee Sugie. 2018. Analysis of the effect of carsharing on transportation usage from the perspective of sharing economy: Focused on 2017 Incheon City carsharing survey.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3, no.2: 107-121. <https://doi.org/10.17208/jkpa.2018.04.53.2.107>
8. 송영현, 신동호, 김종화, 홍원표, 전지훈, 강수현, 전춘복 외. 2019.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 도출을 중심으로. 홍성: 충청남도.
Song Younghyun, Shin-Dongho, Kim Jonghwa, Hong Wonpyo, Jeon Jihoon, Kang Soohyun and Quan Chunfu et al. 2019. Developing the Sharing Economy Model for Chungnam: Focused on Building an Infrastructure and

- Implementing Pilot Projects*. Hongseong: Chungcheongnam-do.
9. 송헌재, 신우리, 조하영. 2019. 서울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 *한국지방재정논집* 24권, 1호: 181-204. Song Heonjae, Shin Woori and Jo Hayoung. Evaluation of the sharing enterprises support program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cusing on the survival of the sharing enterprises.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24, no.1: 181-204.
 10. 신선영, 김영화. 2018. 지역경제, 공유경제로 풀다. *Hot Issue Report* 2018-1호.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Shin Sunyoung and Kim Younghwa. 2018. Solve the local economy by a sharing economy. *Hot Issue Report* 2018-1. Daegu: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11. 이용균. 2018. 광주광역시 공유정책의 현재와 미래: 공유의 대안적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1권, 3호: 1-16. <http://dx.doi.org/10.21189/JKUGS.21.3.1> Lee Yonggyun. 2018. The present and future of sharing policy in Gwangju City: Focusing on the alternative development for common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21, no.3: 1-16. <http://dx.doi.org/10.21189/JKUGS.21.3.1>
 12. 익명. 공유농업기업 대표. 2019a. 저자와의 인터뷰. 9월 6일, 서울. Anonymous. CEO of Sharing Agricultural Company. 2019a. Interviewed by the Author. September 6, Seoul.
 13. 익명. 공유기업 대표 또는 공공기관 공유경제 정책사업 시행자 5인. 2019b. 저자와의 인터뷰. 6월 4일, 공주. Anonymous. CEO of Sharing Agricultural Company. CEO of Sharing Company and Responsible for promoting sharing economic policy projects in public institutions. 2019b. Interviewed by the Author. June 4, Gongju.
 14. 정경석. 2016. 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Jeong Kyungseok. 2016.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Shared Revitalization*. Daejeon: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15. 조용준, 김리영, 신지윤. 2018.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수원: 수원시정연구원. Jo Yongjun, Kim Liyoung and Shin Jiyeon. 2018. *A Study on the Shared Economy Activation Plan in Suwon City*. Suwon: Suwon Research Institute.
 16. 최현. 2013.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공동자원으로서의 특징. *경제와 사회* 98호: 12-39.
 - Choe Hyun. 2013. Redefining common pool resource and the case of common meadows in Jeju Island. *Economy and Society* 98: 12-39.
 17. 함창모. 2018.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 도입방안. 청주: 충북연구원. Ham Changmo. 2018.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hared Economic Policy*. Cheongju: Chungbuk Research Institute.
 18. 허지정, 노승철. 2018. 서울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의 특성과 공간분포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1권, 1호: 65-76. <http://dx.doi.org/10.21189/JKUGS.21.1.5> Huh Jijung and Noh Seungchul. 2018. Characteristics and spatial patterns of Airbnb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21, no.1: 65-76. <http://dx.doi.org/10.21189/JKUGS.21.1.5>
 19. 황영모, 이인우, 오윤덕, 신동훈. 2015. 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전주: 전북연구원. Hwang Youngmo, Lee Inwoo, Oh Yundeok and Shin Donghun. 2015.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hared Economy in Jeollabuk-do*. Jeonju: Jeonbuk Research Institute.
 20. Botsman, R. 2013. 새로운 창업 세대가 몰려온다, 공유혁명이 시작된다. 스마트 클라우드쇼 2013 국제컨퍼런스 기조강연 자료. 8월 1일, 서울: 코엑스. Botsman, R. 2013. The futur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dancing with distribution. Keynote Speech I of Smart Cloud Show 2013. August 1, Seoul: COEX.
 21. Botsman, R. and Rogers, R. 2010.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New York: Harper Collins.
 22. Juniper Research. 2017. *Sharing Economy: 3 Industries ripe for disruption*. Hampshire: Juniper Research.
 23. Lessig, L. 2008.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New York: Penguin.
 24. Pollio, A. 2019. Forefronts of the sharing economy: Uber in Cape Tow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3, no.4: 760-775. <https://doi.org/10.1111/1468-2427.12788>
 25. Vith, A., Oberg, A., Höllerer, M. A. and Meyer, R. E. 2019. Envisioning the 'Sharing City': Governance strategies for the sharing econom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9, no.4: 1023-1046.

-
- 논문 접수일: 2020. 1. 10.
 - 심사 시작일: 2020. 1. 28.
 - 심사 완료일: 2020. 2. 25.

요약

주제어: 공유경제, 충청남도, 공유경제 정책

본 논문은 공유경제 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적용될 때의 쟁점을 파악하고, 충청남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의 공유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와 중앙,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개념, 가치, 기능, 단계, 자원 등 지역 공유경제 정책의 주요 쟁점사안을 분석하였다. 이후 충청남도 주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정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질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이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방향성 확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차원의 공유경제 개념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공유경제의 주요 기능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정책화해야 한다. 셋째, 공유경제 발전단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희자원 중심의 다양하고 입체적인 공유자원 발굴·관리가 필요하다.

